

KWDI

해외통신

2020년 10월 1차 (2020.10.01.~1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여성에 대한 피임지원서비스 감소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여성들 정부의 피임 관련 예산 삭감으로 피임 시술을 받거나 피임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성과 생식 건강을 위한 초당 의회 모임(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the UK: 이하 APPG SRH)는 2020년 9월 10일 발표한 ‘여성의 삶, 여성의 권리(Women’s Lives, Women’s Rights: Strengthening Access to Contraception Beyond the Pandemic)’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 일반병원들(GP)과 시설 병원들이 피임 지원 서비스를 줄이면서 여성들이 제때 피임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PPG SRH는 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활동하는 비공식 모임으로 법안을 내놓는 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APPG SRH는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협업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APPG SRH는 여성건강부 장관(Minister for Women’s Health),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등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구술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일상적으로 가능했던 장기 피임(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ve: LARC) 시술이 중단됐다. 장기 피임이란 한시적 피임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피임 방법으로 자궁 내 삽입하는 피임 기구와 호르몬 피임 요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피임 시술이 가능한 전체 병원 중 54%가 긴급 피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했고, 전체 중 39%가 피임 시술 합병증 치료 서비스를 중단 또는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APPG SRH(2020.9.20.),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ttps://www.fsrh.org/policy-and-media/all-party-parliamentary-group-on-sexual-and-reproductive-health/>
(접속일: 2020.9.20.)
- APPG SRH(2020.9.10.),
“Women’s Lives, Women’s Rights”,
<https://www.fsrh.org/documents/womens-lives-womens-rights-executive-summary/>
(접속일: 2020.9.20.)

- 📌 영국에서 피임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으로 국민건강서비스(NH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NHS 산하 GP 연합체인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CCGs)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피임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거나, 피임 업무를 담당했던 필수 의료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면서 여성들이 원치 않을 임신을 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
- 📌 보고서는 영국의 피임 지원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7~2018년도 성과 생식 건강을 위한 예산(SRH budgets)은 2015년도와 비교해 8,120만 파운드 (한화 약 1,213억 원) 깎여 12% 줄었고, 같은 기간 순수 피임 예산도 2,590만 파운드 (약 390억 원) 줄어 감소폭이 13%나 됐다.
- 📌 특히, 이 기간 장기 피임 시술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고서는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 일반병원들에서 환자에게 장기 피임 시술을 하면 정부가 진료 및 시술비를 일반병원에 되돌려 준다. 그런데 GP의 예상 청구액보다 정부가 적은 금액을 환급하다 보니 일반병원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장기 피임 시술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정부 예산 삭감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GP에서 의료진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피임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 📌 APPG SRH 의장인 대임 다이애나 존슨 의원은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원할 때 피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런 현실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GERMANY



독일, 조산자녀 대상 수당지급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부모휴직 수당’ 개선

채혜원 독일통신원

- 📌 독일 연방 정부가 ‘부모휴직 수당(Elterngeld)’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가 높은 가족 정책인 ‘부모휴직 수당’을 더욱 이용하기 쉬워졌다는 입장이다.
- 📌 독일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의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전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를 지급한다. 아버지 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하는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12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명이 2개월 이상을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17.), “Elterngeld und ElterngeldPl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elterngeld/elterngeld-und-elterngeldplus/73752> (접속일: 2020.9.28.)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와 파트너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도입됐다. 이 수당은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부모는 월별 수당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지원받는다. 또한 부부나 파트너 모두 시간제 일을 하면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정책에 따라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16.),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kabinettschliesst-verbesserungen-im-elterngeld/160580> (접속일: 2020.9.28.)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약 2백만 명의 부모가 부모휴직 수당을 받았고 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 3%에 그쳤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 40%까지 증가했다”며 “많은 부부 및 파트너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가정을 양립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첫째,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허용되는 부모의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32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는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함께 시간제 일을 하는 부부 및 파트너를 지원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의 허용 근무 시간 역시 이전 주 25~30시간에서 주 24~32시간으로 범위를 늘렸다. 현재 독일 부모의 1.9%(약 18,5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수당 플러스’ 수당을 받는 아버지의 27.8%(약 8,0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고 있다. 셋째, 자녀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추가로 한 달 더 부모휴직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부모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와 파트너 지원을 확대하고 조산아 부모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필요한 예산을 위해 부모휴직 수당 지원 자격을 수정했다. 이전에는 합계 연간 소득이 50만 유로(약 6억 8,354만 원) 이하인 부모에게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연간 30만 유로(약 4억 1,012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독일 정부는 이로 인해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사람 중 0.4%(약 7,000명)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 부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부모휴직 수당 없이도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자녀 양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부모의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 소득 25만 유로(약 3억 4,177만 원) 이하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부모의 68%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며, 48%는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의 55%는 가족 정책이 부부 또는 파트너가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82%는 ‘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부모나 파트너가 동등하게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로 2021년 2주의 유급 부성휴가 도입 예정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위스는 중대한 법률 및 제도적 결정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는데, 2020년 9월 27일에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60%가 넘는 투표자들이 부성휴가 도입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위스는 2005년에 14주 유급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처음 도입했다. 남성의 경우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자녀 출산으로 남성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자체 재량으로 허용해 줬지만, 부성휴가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남성은 이사하는 날 하루 연차를 내듯 하루나 이틀 정도 연차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 스위스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성휴가 도입을 위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안건으로 남아있었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작년 9월, 부성휴가 2주 도입 추진안이 승인되었지만, 보수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 Swiss People's Party)를 비롯해 반대하는 정당들이 부성휴가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 이번 국민투표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장관은 이번 투표 결과는 부모 및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이번 투표로 부성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약 23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성휴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여 적립하는 사회보장 연금 체계의 일부인 소득보장제도에서 지출하게 된다. 유급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은 임금의 최대 80%, 2주 휴가 기간 총 최대 2,744 스위스 프랑(한화 약 3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투표 결과로 부성휴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성휴가 제도가 도입되면 남성들은 주말 포함 총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4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최소 5개월 스위스에서 근로, 최소 9개월 스위스 연금 낸 남성이며, 부성휴가 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시점부터 출산하는 자녀의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Swiss Info(2020.09.27.), "Swiss voters approve paternity leave, bury family tax breaks",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family-friendly-proposals-set-for-mixed-results-at-ballot-box/46052078> (접속일: 2020.10.08.)
- The Local(2020.08.1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Switzerland's paternity leave referendum", <https://www.thelocal.ch/20200811/everything-you-need-to-know-about-switzerlands-paternity-leave-referendum> (접속일: 2020.10.08.)
- The Local(2020.09.29.), "How will paternity leave look in Switzerland - and who can claim it?", <https://www.thelocal.ch/20200929/how-will-paternity-leave-look-in-switzerland-and-who-can-claim-it> (접속일: 2020.10.08.)

스위스에서 가족 친화적 정책 발전을 목표로 약 4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Pro Familia Schweiz 대표는 이번 투표 결과가 남성은 밖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중시하던 스위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약 17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둔 스위스 노동조합 연합 Travail Suisse 측에서도 이번 투표가 스위스의 가족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서, 남성 노동자들이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등 22개국 여성의 58%가 온라인 성희롱 경험, 소셜미디어의 젠더폭력 예방조치 강화 필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0년 10월 첫째주, 비정부 국제 구호기구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은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 15세 이상 25세 이하 14,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성희롱(online gender-based harassment)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인도 등 22개국의 여성들이 참여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참여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데이터는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집되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성희롱을 “타인의 성,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그 타인에게 해로운 젠더규범을 강제함으로써 해를 끼치는 행위로 스토킹, 괴롭힘(bullying), 성희롱(sex-based harassment), 모욕(defamation), 혐오 발언, 착취, 그리고 젠더 트롤링(gendertrolling: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낙인찍는 은어들을 생산 및 재생산 하는 행위)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이 속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온라인상의 희롱을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22개국 전체 응답자의 58%가 소셜미디어에서 희롱 또는 괴롭힘(harassed or abused)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0%는 길거리에서의 희롱보다 온라인에서의 희롱이 더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온라인 성희롱이 빈번한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39%), 인스타그램(23%), 왓츠앱(14%), 스냅챗(10%), 트위터(9%), 틱톡(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44%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을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고 대답해 현재 소셜미디어가 여성 이용자들을 온라인상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참고자료

- CISION(2020.10.05.), “Online Harassment is Silencing Girls Online, Driving Them from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online-harassment-is-silencing-girls-online-driving-them-from-facebook-instagram-and-twitter-802561885.html> (접속일: 2020.10.10.)
- The Guardian(2020.10.04.),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Flourishing’, and Most Common on Facebook, Surve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oct/05/online-violence-against-women-flourishing-and-most-common-on-facebook-survey-finds> (접속일: 2020.10.10.)
- Plan International(2020), “Free to be Online? Girls’ and Young Women’s Experiences of Online Harassment”, 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biaag/SOTWGR2020-CommsReport-EN.pdf (접속일: 2020.10.10.)

한편, 캐나다에서는 1,002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캐나다 응답자의 62%가 ‘온라인 성희롱/괴롭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온라인 젠더폭력 경험자의 25%는 ‘자주’, 35%는 ‘매우 자주 온라인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캐나다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온라인 성희롱의 주된 양상으로는 모욕적인 언어가 72%로 가장 높았고, 고의적인 망신 주기가 64%, 외모 놀림이 61%, 성희롱이 55%, 스토킹이 51%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응답자들의 72%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빈번한 형태의 부정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응답자들의 48%는 온라인 희롱 및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괴롭힘을 무시하겠다고 했으며 37%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를 신고 하던가 프라이버시 세팅을 강화하여 차단하겠다고 응답했으나, 19%는 아예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행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하였고, 8%는 소셜미디어 자체를 끊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조사 참여자들의 이러한 응답에 대해 플랜 캐나다는 현재 소셜미디어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는 있으나 만연한 온라인 폭력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소셜미디어상의 신고 제도를 손쉽게 개선해야 하고 가해자를 빠르게 식별해 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측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플랜 캐나다는 소셜미디어들이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해야 함이 중요하므로 여성들과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